

첨부자료 2.

정부의 장애인 복지예산 현황 및 사회복지세 도입 필요성

○ 2010년 중앙정부 장애인 복지예산 35억 7천만원 감소

- 2010년 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은 2009년(추경) 대비 35억 7천만원 감소된 7,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
- 복지부 예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중 3.6%에 불과.
- 2010년 복지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역시 19조 5,855억원으로, '09 본예산(18.43조원) 대비 6.2%(1.2조원↑) 증가했으나, 2009년 추경(19.71조원) 대비 0.6%(0.1조원↓) 감소.

『2010년 장애인복지예산』

(단위: 백만원)

예산		구 분	'09예산	'10예산	증 감	
			(A)	(B)	(B-A)	%
일반회계		장애인복지	556,539 (추경포함)	656,216	99,677	17.9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1,900	1,900	0	0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장애인차량LPG지원	110,500	23,965	-86,535	-78.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40,097	23,387	-16,710	-41.47
총계			709,036	705,468	-3,568	-0.5

○ 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30조원 감소, 지방 장애인복지사업 가장 심각한 타격

-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5년간 30조원 정도 줄어듦 전망.
- 2005년 노무현 정부에 의해, 장애인 복지 사업 24개가 지방으로 이양. 이는 복지 분야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이양된 것으로, 노인복지 13개, 아동복지 11개, 보건의료 6개, 기초생활보장 2개 등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많은 사업 수임.
- 지방재정이 줄어들게 되면, 지방의 복지 재정 역시 감소할 수 밖에 없게 됨. 따라서 지방으로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

	번호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 (24개)	1	장애인복지관운영
	2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4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
	5	공동생활가정운영
	6	의료재활시설운영
	7	장애인체육관운영
	8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9	시각장애인재활지원센터운영
	10	청각장애인(수화통역센터운영)
	11	정신지체인(자립지원센터운영)
	12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운영
	1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14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15	청각장애아동달팽이관수술
	16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17	장애인생활시설운영
	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19	장애인복지관기능보강
	20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
	21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
	22	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
	23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운영
	24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운영

○ 진보신당,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지방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 2010년 3월 3일 사회복지세법 발의(조승수 진보신당 국회의원)
- 연간 14조원 복지재원 확충
- 중앙정부 복지재정으로 7조원 사용 → 조세불평등 완화, 복지재원 확보
- 지자체 복지재정으로 7조원 지원(지자체 4조원, 지방교육청 3조원)
 - 지자체 복지재정난 해소 및 자치복지시대 구현
-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패키지

